

한미 FTA 체결과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 출판계 미증유의 길을 걷다

한미 FTA가 결국 체결되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한미 FTA 체결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협상 시한' 까지 정해놓고 임한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는 없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9개 출판단체 역시 지난 3월 26일 '한미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출판계의 성명서'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한미 FTA 체결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협상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출판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저작권 보호기간은 '예외 없는 70년 + 유예기간 2년'으로 타결되었다.

글·장동석 기자 | 사진·박신우 기자



주지의 사실처럼,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는 것 자체가 출판계로서는 커다란 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4월 18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설명회>에서 김정배 문화관광부 저작권팀장은 “미국이 저작자가 자연인일 경우 사후 70년, 법인과 같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 발행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까지 보호 연장을 요구했지만, 미국과 호주 FTA 수준인 두 분야 공히 70년 수준에서 타결했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출판계를 위해 ‘할 만큼 했다’는 표현인 셈이다.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가보자. 문화관광부는 회원 이메일을 통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 직후인 지난 4월 4일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이메일에서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 학회에 연구용역을 준 자료를 바탕으로 출판 분야가 저작권료를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679억 원으로 연간 34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의 비중은 연 4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출판계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장영태 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홍보팀장은 “현재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 세계 70여 개국이 보호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 1만 종이 넘는 번역물이 출간되고 있는 상황에서 번역물 가운데 5%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가정해도 연 210억 원 이상 손실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 FTA 체결의 파급효과를 미국으로만 제한해서 발표한 문화관광부의 자료는 어찌 보면 타당성이 높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이 여타 국가와의 관계와 교역에 미칠 후폭풍을 애써 무시한다면 그 역시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판계 달래기 용으로 전략한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

한미 FTA 타결 이후로 가보자. 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4일,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직접 나서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브리핑 서두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출판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 다양한 지식과 콘텐츠를 창출하는 기간 문화산업인 출판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고, 이를 주요 일간지들은 ‘FTA 직격탄 맞은 출판계 달래기’라는 표현으로 마치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이 한미 FTA 체결 후 급조된 것인양 보도했다.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은 지난해 초 출판계와 학계, 정부, 연구소 등 출판 관련 전문가 15인이 참여한 ‘출판지식산업육성 TF’의 토의는 물론 출판 관련 기관과 단체, 외부 전문가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문화관광부의 표현에 따르면 ‘책으로 만드는 글로벌 지식문화강국-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문예부흥의 시작’이라는 정책 비전에 따라 추진된 결과물이다.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의 실효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문화관광부는 한미 FTA 타결 직후 서둘러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애써 만들어낸 결과물을 출판계 ‘면피용’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한 출판사 대표는 “물론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는다는 좋은 명분으로 시작했겠지만, 공동어 만든 출판산업 육성안을 일회성으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출판계가 만드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때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까지 세계 5대 출판지식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이를 위해 3조 8천억 원 수준인 출판 시장 규모를 10조 원으로, 연 4만 5천 종인 출판저작물 발행종수를 15만 종으로, 76%인 국민 연간 독서율을 90%로, 1억 8천 불 수준인 수출액을 5억 불로 증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육성방안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출판계가 한미 FTA의 파고를 넘어 세계 5대 출판강국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과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미 FTA는 체결되었다. 국회 비준과 2년의 유예 기간을 생각하면 ‘아직 여유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과 같은 정부의 출판산업 청사진을 믿고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출판계 인사는 “출판계가 직접 출판의 미래를 걱정하고 내다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지금이라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한미 FTA뿐 아니라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면서 “지금 출판계는 미증유(未曾有)의 길을 걷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자료, 올해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

글 송보경 기자

“이르면 9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지난 4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도서관협회(회장 한상완) 주최로 열린 <한·독 도서관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조왕근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 한양대가 지난 2005년부터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 교수는 컨퍼런스에 앞서 <도서관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기자 간담회에서 그간의 진행 사례와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김일성대 도서관 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작업 중”이라고 전하며 “5월 중 디지털화 한 자료 4천여 점을 넘겨받을 것”이라고 말

했다. 디지털자료 전체 목록데이터를 작성, 자료를 스캐닝 해 원문 자체 전송 방식으로 자료 웹사이트 국내 오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서목록 검색만 가능했던 북한도서를 원문으로 접할 수 있게 됐다. 공개되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소장 자료는 대부분 과학 기술관련 전문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통일부 정분희 통일자료관리팀장은 “구체적인 협의절차가 필요하지만 회원제로 접속자 제한을 두되 가능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은 30만 종 25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 최대의 도서관이다. ■